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6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18일 (음력 8월 29일) 수요일



Photo 漫評

역풍 맞을라

자유한국당의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위원수위를 넘어서는 발언이 나오자 홍준표 대표가 급제동을 거는 등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날의 이례적인 상황은 김이수 한법제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류어해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에서 비롯됐다. 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글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새롭게 한계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 해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탄핵까지 언급했다. 홍 대표는 "오버액션하지 말라"며 사실상 '엘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는 아직 탄핵 후폭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국당이 탄핵을 언급할 경우 더 큰 역풍에 휩쓸릴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글=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스1



홍준표



류어해



홍준표

광주·전남 오존농도 기준치 초과...저감 대책 시급

광주·전남지역 오존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광주·전남 대기 측정망 23곳 중 22곳의 측정값이 기준치(8시간/0.06pp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농도가 0.09ppm을 넘는 곳도 12곳(순천시 순천만·연향동·호두리, 목포시 부흥·용당동, 여주시 광무·여천·문수동,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광주시 두암·오선동,

대기 측정망 23곳 중 22곳 초과...순천만 일대 0.106ppm 최고치

유해물질 변질돼 호흡기 질환 악화...장시간 노출시 사망자 증가

광양시 광양읍)에 달했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오존농도가 높은 지역은 순천만 일대로 최대농도 0.106ppm을 기록했다.

목포 부흥동(0.104ppm), 여수 광무동(0.103ppm), 여수 여천동·영암 나불리(0.099ppm), 순천 연향·여수 문수동(0.096ppm), 광주 두암동(0.092ppm) 등이 뒤

를 이었다.

지표면의 오존이 햇볕과 만나면 유해물질로 변질돼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오존농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사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는 0.08ppm 이상 농도가 지

속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00명당 1~2명이 초과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여름철 일평균 오존 농도가 0.01ppm 증가할 때 지역·연령별로 2.1~2.6%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10년 간 연도별 오존 대기환경 기준

(8시간/0.06ppm) 달성률이 감소세를 보인 점을 토대로 오존농도 관리·감축도 소홀한 편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2007년 9.3%, 2008년 4.3%, 2009년 1.7%, 2010년 2.6%, 2011년 2.5%, 2012년 2.0%, 2013년 0.8%, 2014년 0%, 2015년 0.4%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심각한 오존 농도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춘성 기자

Imagine your Korea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수도 목포

10월의 어느 멋진 항해! 우리들의 희망이여!

The New 목포항구 축제

신명나는 파시한판!

2017. 10. 27(금) ~ 29(일)
목포항·삼학도 중앙공원 일원

주최 주관: 목포시·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목포대학교수목관리사무소, 보해양주주식회사, 하이트르노



광주 북구, 행복실은 연탄나눔 행사

광주 북구는 17일 동림동 인근에서 박영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한파를 녹여줄 '행복실은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복실은 연탄은 저소득가정 15세대에 세대당 200장씩 총 3,000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신규 공무원 보직 전 교육 '뒷전'

광주·전남지역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 전 교육이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광주시 9급 공무원 중 기본교육을 받지 않은 채 보직발령된 공무원은 24명으로 전체 245명 중 9.8%에 달했다. 10명 중 한 명꼴이다.

2014년 71.5%, 2015년 28.7%에 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임용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보직 전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토록 돼 있다.

공직업무에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관련 교육훈련은 필수요소이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업무와 공직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을 이수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다 보니 일손이 급한 기초지자체의

광주시 신규임용 9급 전체 245명 중 9.8%...전남은 고직 2.1% 불과

바로 현장 투입시 업무·공직생활 이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원인

관목활빈한 개선이지만, 여전히 10% 가까운 새내기 공무원들이 기본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채 보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7급 공무원의 경우 2014년 13명, 2015년 11명, 지난해 12명 임용됐지만, 보직 전 교육은 전무했다.

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9급은 2014년 929명, 2015년 1042명, 2016년 754명이 임용됐지만 보직 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3년 통틀어 58명, 비율로는 2.1%에 불과하다.

7급은 2014년 36명 중 4명, 지난해 46명 중 4명만 교육을 받았고 2015년에는 43명 모두 기본교육도 없이 보직을 받았다.

경우 보직 전 교육이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원을 바로 발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고, 교육 전담 인원과 시설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다.

황 의원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해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보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기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조직 내 소통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예산 편성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규 기자